

안도걸 “광주 AI시범도시 정부 약속 실현해야”

NPU컴퓨팅센터·국가 AI연구소 제시 광주송정역 증편·시설확충 문제 지적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은 지난 10일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주거 안정 해소, 광주 국가 AI 시범도시 도약을 위한 추진 방안, 광주송정역 지역철도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 대책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광주가 명실상부한 AI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컴퓨팅자원센터를 능가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광주시민들의 상실감을



신뢰와 기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그러면서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 ▲국가 AI데이터센터 컴퓨팅자원·시설·인력 고도화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조성 등 4대 대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대안이 실질적 프로젝트로 구체화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돼야만 광주시민이 정부 약속을 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과제에 대해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 살피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광주송정역의 혼잡과 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광주송정역은 호남고속선의 기종점이자 호남권 핵심 철도 거점임에도 이용객 증가에 견줘 열차 편수·좌석 공급·시설 확충이 한참 뒤쳐져 있다”며 “광주송정역 KTX 이용객은 2004년 953명에서 2025년 1만3천800명으로 14배 증가했으나 운행 편수는 같은 기간 30회에서 48회로 1.6배 증가에 불과하다”고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열차 편성 불균형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광주송정역은 좌석이 적은 KTX-산천형 비중이 48%에 달해 주말·출퇴근 시간에는 예매 한 달 전에도 좌석 확보가 어렵다”며 “환자·고령자가 특실을 확보하지 못해 임의 구간표로 먼저 탑승한 뒤 객차 내에서 연장 결제를 하는 비정상적 이용 관행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대전·동대구역 대비 연면적은 최대 1/6, 편시설은 1/9 수준에 불과하고, KTX 정차역이 송정역 한 곳 뿐이어서 이용객이 집중돼 주말·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이 상시화된

다”며 “시민들이 타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불편한 이용 환경을 감내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광주송정역 증축 사업이 2022년 설계 완료 이후 5차례 유찰된 점을 언급한 뒤 “공사비 현실화 시점이 지연돼 3년 이상 방치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광주송정역 증편·시설 확충·서비스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운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송정역 관련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진수 기자



여야 원내대표 회동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연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삼석 “의료취약지 의료비 완화 시급”

정가 프리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총 10조8천억원에 달한다”며 “전남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26만7천원으로 서울(20만4천원)보다 약 6만3천원 더 많음에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주요 암의 발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전남은 간암과 폐암 환자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러한 양상이 해마다 반복되며 지역별 특정암 발생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최고위원은 “농어촌 주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정책 추진을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수 기자

김태균 도의회 의장 ‘K-스틸법’ 조속 입법 촉구

철강산업 지속가능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기반 마련 강조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더불어민주당·광양 3)은 1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K-스틸법 조속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균형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지난 50여 년 간 국가 산업화를 견인해 온 핵심 기반산업으로 조선·자동차·건설 등 주요 제조업의 근간이 돼 왔다”며 “생산과 수출, 고용 창출 측면에



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여건이 급변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K-스틸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국회 ‘K-스틸법’ 조속 제정 ▲정부의 탈탄소 전환 대응·

지역 상생 종합지원계획 마련 ▲고용 안정·인력 양성·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한다.

김 의장은 “철강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의 근간이자 미래 산업 전환의 시험대”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공정한 산업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스틸법’은 더불어민주당 권항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등이 발의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김재정 기자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확정

국무회의 심의·의결…COP30 발표 예정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 C)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됐다.

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건 등 일반 안건 7건과 대통령령안 7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NDC란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5년마다 스스로 수립해 유엔에 제출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일 공청회에서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두 가지를 정부안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전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보다 강화된 ‘53-61%로 결정하면서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

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확정된 2035 NDC를 오는 2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할 뒤 연내 유엔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보 시스템 복구 및 15개 시스템을 대구 센터의 민간 클라우드(PPP) 영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 280억6천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목적 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됐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